

곡물가 폭등, 위기대처방안은?



김 동 호 기자
농수축산신문

기후변화 여파로 또다시 국제 곡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곡물가 사태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화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에 지난달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실 주최로 열린 ‘곡물가 폭등, 위기대처방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업계의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곡물가 급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위기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1. 위기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최근 반복되는 곡물가 폭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마저도 곡물가 급등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연평도 사태 이후 국방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지만 곡물가가 급등해도 곡물가 안정과 관련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지금의 곡물가 문제의 핵심에는 곡물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내년 국가예산이 평균 5.4%가 늘었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1.2% 증가하는데 그쳤고 그



마저도 기존의 농식품부의 예산이 올해 대비 축소됐다가 이후 조정을 통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국제곡물가격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의 1년 예산을 크게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예산을 줄이려 시도한 것은 정부가 국제곡물가 급등을 너무 안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국제곡물가 급등뿐만 아니라 최근 우량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물가를 잡는다며 농가소득을 줄이고 있다”며 “진정한 물가 안정은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어 “곡물펀드는 엄청난 변동성을 가진 펀드로 향후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일본의 사례처럼 곡물 메이저 사업을 실시해 평소에는 일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다 곡물가의 급등이 예견될 때 이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 사료안정기금 마련 ‘시급’

“1차 산업이 소외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물가 급등은 국내 식량수급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건 다른 무엇보다 축산업입니다. 추석 전후로 전 축종에 걸친 공급과잉과 수입량 증가로 축산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사료가격까지 큰 폭으로 인상될 조짐에 있지만 정부에선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김건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최근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없음을 지적하며 운을 뗐다.

축산업이 전반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불황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항공료까지 지원하며 할당관세 수입을 권장했기에 향후 일어날 불황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식량안보를 위해 농민들도 함께 보호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무·배추까지 수입해오고 돼지고기의 경우 정부가 항공료까지 지원하며 수입을 권장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는 보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생산기반을 무너뜨려 식량안보를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축산업의 규모가 17조4000억원까지 커졌고 국민들의 식생활도 크게 변한 상황에서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곡물가의 진폭에 따라 축산업 전체

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곡물가가 급등하면 사료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곧 축산물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곡물가 급등은 곧바로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사료안정기금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며 향후 해외사료기지를 개발해 국내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수치’에 의존 말고 소비자들의 ‘안심’ 이끌어내야

“1인당 농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목표를 실현하는 건 애초에 모순되는 일입니다.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120평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박환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곡물 자급률은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곡물 자급률을 1%만 높이려고 해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정부가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의구심을 표현

곡물가가 급등하면 사료값이 오르게 되고 이는 곧 축산물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곡물가 급등은 곧바로 축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선 사료안정기금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것이다.

특히 국가정책이 식량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급률을 목표치까지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치의 기반을 둔 목표보단 국제곡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이어 “우리정부도 농업에 대한 시각을 바꿔 농업부문의 R&D 투자를 확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민간부문의 투자도 이뤄지게 된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 ‘칼로리 자급률’ 인식해야

“곡물 자급률만 올리려고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특작채소를 줄이고 해당 부지에 곡물을 심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죠. 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특작채소도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먹거리이기 때문입

니다.”

민연태 농림수산물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제 단순한 곡물자급률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크게 변화한 만큼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 일환으로 앞으론 ‘칼로리 자급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단순히 곡물만을 염두에 두고 자급률을 고려할 게 아니라 축산물, 특작채소 등 소비자들의 섭취가 많아진 품목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정책관은 “소비자들의 식생활 변화로 국내 쌀 소비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축산물 소비량이나 기타 곡물의 소비량은 크게 늘어났다”며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곡물에 대한 자급률만 고려할 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통한 ‘칼로리 자급률’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